

27일 Market Index			
코스피	2288.78	코스닥	695.09
	(+39.22)		(+11.92)
금리	4.254	환율	1417.00
	(+0.046)		(-9.60)

창간 20년

metro 경제

[금융]
카카오뱅크
개인 사업자
금융서비스 확대
08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삼성전자 이재용 시대 개막... M&A·신사업 투자 기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승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치고 취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사회서 '회장 승진' 안건 의결
별도 취임식 없이 일정 소화 예정
"책임 완수, 사랑하는 기업 만들것"
지배구조 개편 등 뉴삼성 급물살
기술 초격차 확보, 실적개선 과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8년간 공백이었던 회장 자리를 이재용 부회장이 채우게 된 것.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다. 실적 회복은 물론 미래 먹거리 육성과 지배구조 개편 등 '뉴삼성'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통해 이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사외이사인 김한조 의장이 발의해는 의를 거쳐 확정했다.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에 대응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별도 취임 행사나 취임사를 발표하지 않고 일정을 소화할 예정

이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대신 이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에 지난 25일故 이근희 회장 2주기 추모식에서 사장단에 전달한 메시지를 공유하며 회장 승진에 대한 책임감과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들 덕분에 뒤쳐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위기 속에서도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며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인재 육성과 기술 투자 및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사옥으로 모인 취재진들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뉴삼성'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故 이근희 회장와 병에 이어 이 회장도 '국정농단' 등 사법리스크로 경영에 매진하지 못했던 탓에 삼성은 한동안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 회장도 사장단

메시지에서 지난 몇년간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하고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나아가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 재건이 꼽힌다. 삼성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로 그룹 통합 조직인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계열사별 각자 경영체제로 돌입한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생명 금융 경쟁력 제고 TF, 삼성물산 설계·조달·시공 경쟁력 TF가 조직돼 임시 운영체제를 수립했지만, 그룹사 시너지가 크게 떨어지고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6년이나 멈춰선 '의미있는 M&A'다. 삼성전자가 100조원 이상 실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M&A를 단행하지 못했다. 일찌감치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 회장 부재속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치며 최근 급성장한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배구조 개편도 뉴삼성을 위한 주요 숙제다. 최근 '금산분리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확립이 시급하다. 이미 삼성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해 내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도 그룹 차원 컨트롤 타워 복원 내용이 담겼으므로 전해진다. 금융과 전자 등 사업별로 중간 계열사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 회장이 컨트롤 타워 복구와 함께 경영권 공격을 피하고 안정성을 제고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 개선도 과제다.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경영 위기로 3분기 큰폭으로 떨어진 실적표를 받아든 상태다. 내년까지 시장 악화가 점쳐지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이 절실하다.

미래 동력 육성을 통한 '초격차' 재확보는 이 회장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선결 과제다.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개편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에서 빨라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15억 초과도 '주담대'... 규제지역 LTV 50%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3高 위기 대대적 규제 완화 '숨통'
안심전환대출 기준도 6억 이하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시름을 앓고 있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의 경제 활력 대책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이 허용되

고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 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자격이 완화된 2단계 접수가 개시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활성화 차원에

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저전력반도체 세계 1위에 도전한다. 바이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도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과학 기술 전략의 무기화 추세에 발맞춰 국가 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로 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7조4000억원을 공급,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29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m-커버스토리

“해외서도 불법과업 면책 없어” 정부, 노란봉투법 사실상 반대

노란봉투법 처리 불투명

“해외에서도 불법과업 관련 면책을 법으로 정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노조 과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위원회 소지와 노조의 불법과업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관련기사 4면>

정부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난색을 표한 데는 일본, 영국 등 불법 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가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당과 함께 정부도 입법 반대 의사를 보이며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과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

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동당도 연일 국회 앞 농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1일 불법 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외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과잉행위 외에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사업장 점거가 위법 행위인지 여부가 논란이다. 노란봉투법 쟁점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도 사업장 점거가 있었고, 사업장은 47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원전·방산 ‘패키지수출’ 정밀 전략 필요... 전 부처가 합심해야” /사진 뉴시스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분회의 일정 11월10일로 연기

▲“월북 근거 충분, 자료도 그대로”... 文측, 조작·은폐설 정면반박
▲野,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키로... “투명성 강화·권한남용 방지”



▲거래소 찾은 이재명 “김진태발 위기 방지한 정부가 리스크의 핵” /사진 뉴시스
▲이종섭·박진, 前주한미군사령관 3명과 한미동맹 발전 논의